



# 한국 과학기술, 길을 묻다

#1 과학기술의 위기,  
보상만이 문제인가?

SERIES

일시 2026년 5월 14일(목), 16시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클럽



## Program

시 간	프로그램	
16:00~16:05 (5분)	<b>기획 배경</b>	
	<b>김윤영</b>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	
16:05~16:25 (20분)	<b>주제발표</b>	
	<b>발표자</b>	과학기술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 치우 개선을 넘어 가치 존중으로 <b>박범순</b>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석좌교수
16:25~17:10 (각 7-10분 /45분)	<b>지정토론</b>	
	<b>좌 장</b>	<b>김윤영</b>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
	<b>토론자</b>	기초과학의 본질 회복 : 지식의 지평 확장과 자생적 혁신 체계 구축 <b>조용훈</b> KAIST 물리학과 KT 석좌교수
		국가적 구호를 넘어 과학기술가(家)의 자율로 : 선도적 R&D를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b>이원준</b> 가천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석좌교수
		농생명 과학, 현장에서 미래를 짓다 <b>한호재</b>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의과학의 미래를 여는 열쇠, 의사과학자의 'Protected Time' <b>박영년</b>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성공의 뒷, 한국 과학기술 정책의 경로 의존성 <b>홍성욱</b> 서울대학교 과학학과 교수
17:10~18:00 (50분)	<b>종합 토론</b>	
	<b>좌 장</b>	<b>김윤영</b>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
18:00	<b>폐 회</b>	

## 참여자 주요 약력

### 좌 장



#### 김 윤 영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

- 숙명여자대학교 기계시스템학부 석좌교수
- 前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석좌교수
- 前 대한기계학회 회장

### 주제발표자



#### 박 범 순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석좌교수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책연구소장
- UNESCO 한국위원회 인문사회자연과학 분과위원장
- 인류세 실무단 위원

### 토론자



#### 조 용 훈

KAIST 물리학과 KT 석좌교수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학부장
- KAIST 국가양자팍연구소 소장
- 前 KAIST 자연과학대학 학장

## 참여자 주요 약력

### 토론자



#### 이 원 준

가천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석좌교수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공학부장
- 전기전자공학자학회(IEEE) 석학회원
-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 한 호 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농수산학부장
- 前 대한수의학회 회장
- 前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장



#### 박 영 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의약학부장
- WHO Classification of Tumours, editor and responsible author
- 前 대한간암학회 회장



#### 홍 성 옥

서울대학교 과학학과 교수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책학부장
- 前 한국과학사학회 회장
- 前 UNESCO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 위원

# I

## 주제발표

**주제발표** 과학기술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 치우 개선을 넘어 가치 존중으로

- **박범순**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석좌교수



주제발표

과학기술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 처우 개선을 넘어 가치 존중으로



박 범 순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석좌교수



과학기술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처우 개선을 넘어 가치 존중으로

박범순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석좌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책연구소장

한림원 원탁토론회  
2026. 5. 14

##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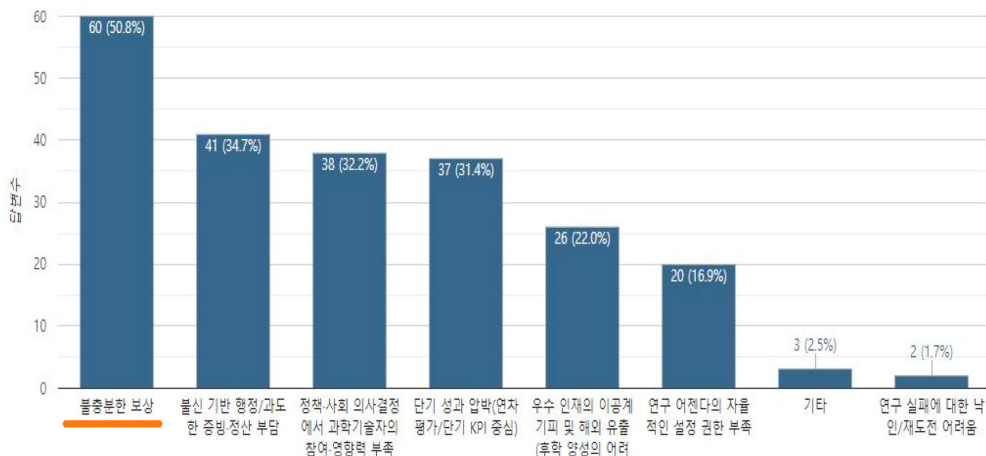
1. 보상만이 문제인가?
2. 헌법상 과학기술 규정과 개정 제안
3. 과학기술자 명칭 변경 제안

### 2026년도 한림원탁토론회 신규 시리즈(한국 과학기술, 길을 묻다) 의견 수렴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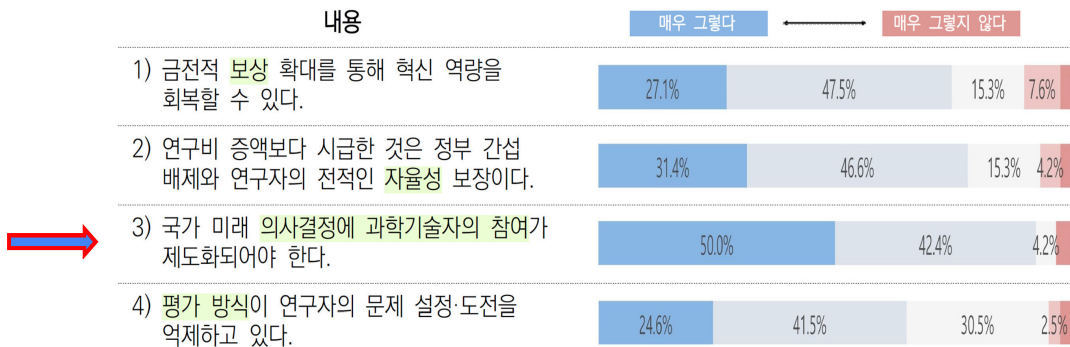
(2026. 2. 10.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책연구팀)

#### [1] 과학기술의 위기, 보상만이 문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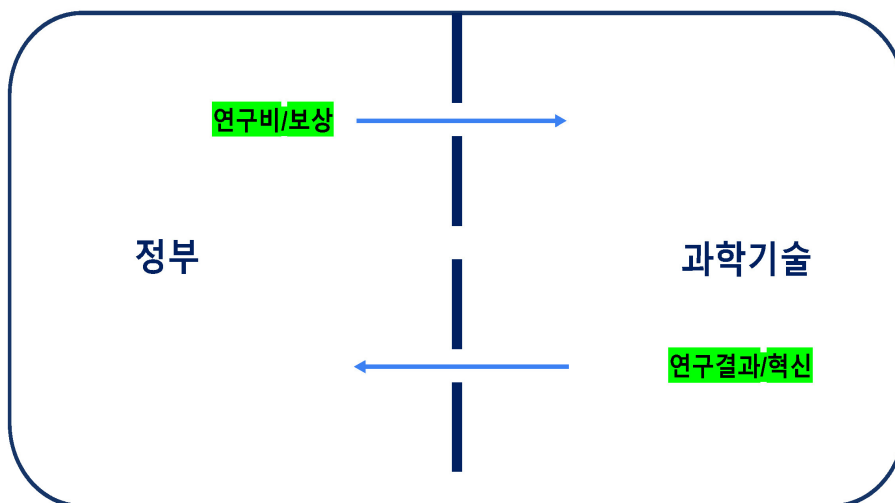
##### 6. 자궁심을 짊어주는 요인으로 ‘가장 크다’ 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2개 선택)



7. 다음 진술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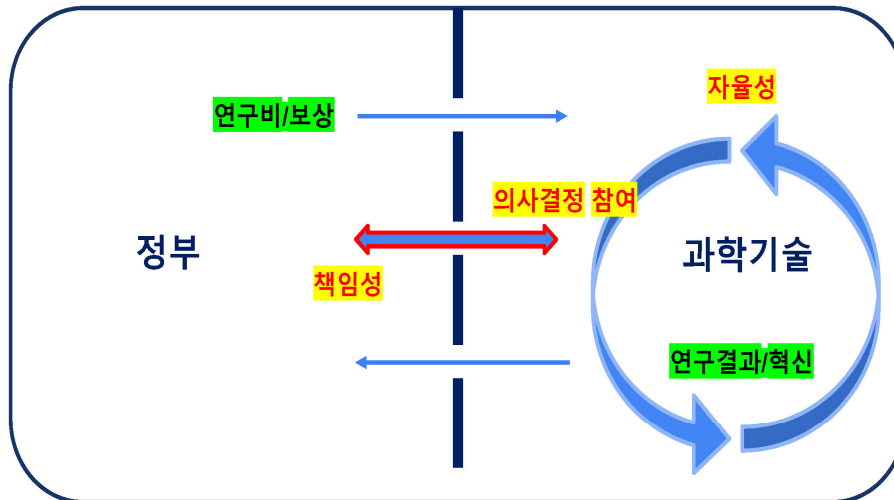


### 기능중심적 사회계약



참고: David H. Guston, *Between Politics and Science* (2000)

## 가치중심적 사회계약



참고: David H. Guston, *Between Politics and Science* (2000)

## 왜 가치중심적 사회계약인가?

- 과학기술은 산업발전의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국방, 외교, 보건, 복지, 교육 등, 국가안보와 민주사회 구축을 위한 핵심 가치
- 과학기술자들의 의사결정 참여는 중요
- 과학기술자들의 자율규제에는 책임성이 전제되며, 이는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해 필수

## 헌법상 과학기술 규정과 개정 제안

### 헌법상 과학(과학기술) 규정 연혁

참고: 부경호 (2018).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과학·기술과 헌법: 제헌헌법 제5조의 '창의 존중'과 미래혁신," 기술혁신학회지 제21권 3호.

<b>군사 정권</b>	제헌헌법 (1948.7.17)	<b>제14조</b> 모든 국민은 <b>학문과 예술의 자유</b> 를 가진다. 저작자, 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5차 개정 (1962.12.26)	<b>제19조</b> ② 저작자·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b>제118조</b> ① <b>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진흥에</b>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b>경제·과학심의회</b> 를 둔다. ② 경제·과학심의회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경제·과학심의회는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차 개정 (1972.12.27)	<b>제19조</b> 상동 <b>제123조</b> ① <b>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기술은</b> 창달·진흥되어야 한다. ② 대통령은 <b>경제·과학기술의</b> 창달·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8차 개정 (1980.10.27)	<b>제21조</b> 상동(조문번호만 변경) <b>제123조</b> ① 국가는 <b>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고 과학기술을</b> 창달·진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b>국가표준제도</b> 를 확립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현행헌법 (1987.10.29)	<b>제22조</b> ② 저작자·발명가· <b>과학기술자</b> 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b>제127조</b> ① 국가는 <b>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b>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b>국가표준제도</b> 를 확립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헌법 제127조 보완 필요성

참고: 김나정, 권성훈 (2025), "과학기술 시대에 대응하는 헌법 제127조 개정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389호

- ①항: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
- 과학기술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으나 **경제발전의 도구로 봄**
  - 생명공학,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술 발전이 인권이나 안전과 충돌하는 사적 영역에서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 원칙 부재**
  - 예: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노동권**, 기술접근성의 문제로 인한 **평등권**, 감시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생활보호**, 환경피해로부터 보호할 **환경권**
- ③항: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자문기구의 명칭과 구체적 **위임규정이 없고 목적도 모호**
  - 예: 이명박 정부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으로 개정(교육정책확대),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문 외에 심의 기능 수행

## 2017년 헌법 조문 개정 운동

- 설문주제 : 헌법 내 과학기술, 어떻게 볼 것인가?
- 설문주관 :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한겨레 사이언스온](#)
- 조사시행 : [BRIC/SciON](#)
- 설문후원 :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MATERIC\)](#), [의과학연구정보센터\(MEDRIC\)](#), [전자정보연구정보센터\(EIRIC\)](#),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
- 설문기간 : 2017년 10월 11일 ~ 10월 17일 (7일간)
- 조사대상 : 과학기술인 종사자

Q7

과학기술 헌법 조항으로 과학기술계 정책과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1,758명 (77%)
- 2)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522명 (23%)

Q8

과학기술 헌법 조항으로 실제 본인의 과학기술과 관련한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1,577명 (69%)
- 2)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703명 (31%)

Q15

[쟁점3-2] 헌법 127조 ①항에서 국가는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도구적인 관점에 국한해 인식할 수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 1) 동의한다. 1,672명 (73%)
- 2) 일정부분 동의한다. 148명 (6%)
- 3) 동의하지 않는다. 254명 (11%)
- 4) 모르겠다. 206명 (9%)



## 과학기술계 개정안



### ESC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개정안 (2017.11.23)

제127조 제1항에서 ‘과학기술의 혁신’을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삼도록 명시한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

신설 조문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제1장 총강’에 두는 것을 제안한다: “국가는 **학술 활동과 기초 연구를 장려**할 의무가 있다.”



### 과총 개정안 (2018.1.26)

전통문화의 계승, 민족문화의 창달을 제시하는 헌법 9조에 ‘미래 사회에 대비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에 노력해야 한다**’는 **2항을 새로 신설**

## 문재인 정부 개정안

###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2017.2 - 2018.1)

조문 시안: 【다수의견】 제127조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과학기술자문기구는 법률에 근거해서도 설치 및 운영 가능)

【소수의견】: 과학기술의 혁신 등은 경제의 장 뿐만 아니라 기본권 장에서 규정되고 있는 헌법 제22조의 학문의 자유와도 관련됨. 현행 헌법 제127조 제1항은 경제의 장에서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규정한 것이므로 굳이 “공공복리”를 추가할 실익이 없음.

### 문재인 정부 헌법 개정안 (대통령, 2018.3.26.)

제 134조 ①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초 학문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을 혁신**하며 **정보와 인력을 개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하는 현행과 동일>

**국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불성립**

## 2026년, 헌법적 “사회계약” 논의가 필요한 시점

---

### 배경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제1호: **헌법 개정**
- 이재명 정부 혁신경제 전략
  - 전략1: AI 3대 강국
  - 전략2: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시스템 혁신, 인재강국, 전략기술)

### 방향

- 문재인 정부안 수정
  - 경제발전 + 과학기술발전 + 국민 삶 향상 **병렬적 배치**
- 새로 추가
  - 과학기술 자율성 + 사회적 책임성 + 기본권 보장 + 사회통합 강조

## 시안 - 현 조문(제127조 1항) 개정

---

### 예시 1)

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며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인력과 정보를 개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 연구의 성과로 창출된 지식과 경제적 이익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 있게 활용한다.

### 예시 2)

국가는 과학기술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활용은 국민의 존엄과 안전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도록 관리한다.

과학기술자(者) → 과학기술가(家)로 명칭 변경

## ‘과학자’의 어원

---

윌리엄 휴얼(William Whewell), 1834

art → artist

science → scientist (분과 학문이 아니라 통합 학문을 강조하기 위해)  
당시 쓰이던 말: cultivator of science, natural philosopher, savant,  
naturalist (naturforscher)  
부정적 어감 (economist, atheist 경우)

한국에서는..

예술 → 예술가(家)

과학 → 과학자(者)

## -자(者), -가(家), -사(士) 직종 구분

사전적 의미 (이정복(2010), “한국 직업 이름의 위계와 차별”, <우리말글>, 49: 1-36)

- -‘자(者)’: 어떠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
- -‘가(家)’: 어떠한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전문가도 家로 끝남)
- -‘사(士)’: 자격증이 있는 사람 (의사, 간호사, 변호사, 기술사 등)

-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여전히 모호함 (어떤 일에 종사하여 전문가가 된 사람은?)
- 직업 (경제 수단) + 가치 (사회적 의미)

헌법에서 언급된 직군

제22조

-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 사례

-‘자(者)’: 고용된 직업인으로서 정체성

- (학자) 과학자, 기술자, 공학자, 농학자 과학기술자, 의사과학자, 연구자
- (업자) 교육자, 기자, 관리자, 연기자,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

-‘가(家)’: 일자체에서 정체성

- (정체성이 부여된 생업) 예술가, 발명가, 작가, 평론가, 문필가, 건축가, 소설가, 화가, 안무가, 작곡가, 도예가, 조각가, 만화가, 점술가
- (어느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 정치가, 기업가, 사업가, 혁명가, 전문가

## 현실 참여 전문가로서 과학자

장 폴 사르트르, <지식인을 위한 변명>  
(1972)



[18세기 말] 실천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은 그들 시대의 과학과 기술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탐구 방법이었던 분석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분석적인 방법을 역사와 사회의 문제에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용은 합리성이 배제된 채 여러 학설의 혼합주의 위에 근거해 있었던 귀족계급의 전통, 특권, 신화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20세기] 지식인은 언제나 실천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 중에서 나옵니다. ... [그런데 고용자는] 자기 사업의 정확한 본성에 따라서 ... 실천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임용합니다. 직업은 이때 그 자체가 공급될 일자리요 수행하게 될 역할을 뜻합니다. ...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이 일자리라는 것도 사실상 그들이 그날그날 수행해야 할 기능의 단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 용어 변경의 의미

고용된 지식인  
(전문지식 개발의 도구)



실천적 지식인  
(사회변화 주체로서 책임)

과학자  
기술자  
공학자  
농학자  
과학기술자  
의사과학자



과학자  
기술자  
공학자  
농학자  
과학기술자  
의사과학자

직업적 보상



사회적 역할 강조  
(보상은 따라오는 것)

## 명칭 변경 - 화두 던지고 공감대 형성

- 과학기술한림원 내부 전문가 토론회·간담회 개최
- 전문가 및 과학기술분야 학생 공개 토론회·간담회 개최
- 대국민 명칭 공모 및 설문을 통한 의견 수렴
  - 과학기술 전문가에 대한 의식 향상 및 사회적 역할에 대한 토론
-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 절차

한림원의 창 (2020 여름)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에  
희망을 심은 과학자

**정근모**  
제4대 한림원장



**“내 꿈은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들이  
전 세계를 품고  
연구하는 것”**

*KAIST와 고등과학원 설립 산파...연구시스템 확립 기여*  
*ICT 발전 위한 초석 마련...TDX 개발 시작으로 반도체 강국 발돋움*  
*한국형 표준형 원자로 개발 추진해 기술자립 달성*  
*한림원 제4대 원장으로 법적 지위 명기...위상 향상에 기여*


과학기술자 정권을 두 차례 역임하며 과학기술 입국의 밑거름을 완성한 과학기술  
행정가, KAIST와 고등과학원 설립을 제안한 선구자, 한국인 최초로 핵융합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표준형 원자로 탄생의 기반을 마련한 개척자. 정근모 제4대 한림원장이  
결어온 깊은 대한민국 현대 과학기술의 역사가 됐다. 과학자로 또는 권료로 때로는  
교수 및 연재·아임 기업체 사장으로 우리 과학계에서 크고 작은 업적을 이룬 그가  
있었기에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는 오늘날의 영광을 일궈낼 수 있었다.

정근모 원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소에서 한 사람의 과학자로서 최첨단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 대신 조국 땅에 '희망'이라는 말을 심는 것을 택했다. 그가 품은  
희망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꿈을 이룰 수 있는 초일류  
대한민국 건설. 그는 국민이 사랑받게 살고,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경이  
하게 자존심을 지켜내는 나라에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과학  
기술은 그 신념을 현실화시켜줄 가장 중요한 열쇠였다. 그 신념은 지금도 굳건하다.  
조국의 발전을 품은 정근모 원장의 희망이 꿈에 그치지 않고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떻게(how)"를 찾아내는 행동가였기 때문이다. '무엇(what)'이 필요한지  
알아서서 요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것을 실제로 이뤄내는 사람은 흔치 않다.  
산수(壽壽)가 넘은 나이에든 불침주야 자신의 쓰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그를  
한림원 원장실에서 만났다. 인터뷰 자리에서 꺼낸 하얀 종이 위엔 담담하고 시려  
깊은 과학자의 역사가 묵묵히 늘려 쓴 글씨처럼 또렷하게 담겨 있었다.

한림원의 창 (2020 여름)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에  
희망을 심은 과학자

**정근모**  
제4대 한림원장



**미래 한국 과학기술계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과학기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미래를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앞장서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의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하길 바랍니다. 큰 뜻을 가슴에 품고, 꿈을 펼쳐나가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과학기술로 일어난 나라임을 잊어서 안 됩니다. 과학기술의 불씨를 새롭게 되살려야 경제가 살고, 그래야 나라에 활기가 생깁니다. 젊은 과학자들이 그 주인공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과감히 그 일에 열중해 보세요. 흥내 내는 연구보다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나가는 과감한 도전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깊은 과학자의 역사가 꼭꼭 눌러 쓴 글씨처럼 또렷하게 담겨 있었다.

# II

## 토론

- 좌 장 **김윤영**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
- 지정토론 1 **조용훈** KAIST 물리학과 KT 석좌교수
- 지정토론 2 **이원준** 가천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석좌교수
- 지정토론 3 **한호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 지정토론 4 **박영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지정토론 5 **홍성욱** 서울대학교 과학학과 교수



## 지정토론 1

# 기초과학의 본질 회복 : 지식의 지평 확장과 자생적 혁신 체계 구축



조 용 훈

KAIST 물리학과 KT 석좌교수  
(한림원 이학부장)

최근 우리 사회에서 기초과학은 국가의 존립과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전략적 자산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진국이 개척한 길을 빠르게 따라가는 추격형 모델로도 충분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으나, 이제는 스스로 원천 지식을 창출하지 못하면 기술 패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선도형 경제 구조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기술, 신물질, 차세대 바이오와 같은 첨단 산업은 수십 년 전 정립된 물리, 화학, 생명과학의 기초 이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원천 기술의 보유 여부가 곧 국가의 기술 주권을 결정하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의 본질은 인류 지식의 지평을 확장하는 숭고한 지적 탐구에 있습니다. 기초과학은 본질적으로 자연의 원리를 규명하는 활동이며,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지식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는 연구 단계에서 미리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충분히 축적된 후 후속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됩니다. 따라서 기초과학의 가치를 당장의 산업적 유용성이나 경제적 수익률로만 재단하는 것은 학문의 자율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비연속적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의 저수지를 고갈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현재 우리 연구 환경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기초과학을 단순히 경제 발전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기인합니다. 상업적 유용성만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와 논문 편수, 특허, 기술 이전료 등 단기적인 수치에 매몰된 평가 시스템은 과학자를 진정한 지식의 개척자가 아닌 단기 과제 수행자로 전락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성과 중심의 서열화는 연구자들이 실패 위험이 큰 도전적 연구를 기피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평이한 연구에만 안주하게 함으로써, 한국 과학기술의 잠재력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개인의 전문성과 독창성을 존중하는 사람 중심의 지원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국가가 미리 정해놓은 전략 분야에 연구자를 끼워 맞추는 방식에서 벗어나, 탁월한 역량을 갖춘 과학자가 자신의 호기심을 바탕으로 장기간 한 우물을 파며 연구 분야를 주도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회복입니다. 불확실한 탐구 과정을 묵묵히 지켜봐 주는 인내와 실패를 용인하는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연구자는 비로소 자긍심을 가지고 새로운 지식의 큰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기초과학의 강화는 단기적인 경제 지표를 올리는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지적 체력을 다지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번영의 토대를 물려주는 일입니다. 기초과학이 가지는 본연의 자율성과 자생적 혁신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한국 과학기술이 추격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진정한 과학 강국으로 거듭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과학자가 스스로 지식의 설계자라는 자부심을 느끼며 몰입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 지정토론 2

## 국가적 구호를 넘어 과학기술가(家)의 자율로 : 선도적 R&D를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이 원 준

가천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석좌교수  
(한림원 공학부장)

### 추격형(Catch-up) 거버넌스의 한계와 경로 의존성

정부 중심 하향식(Top-down) 의사결정 체계의 한계를 직시해야 합니다. 과거 기술 추격기에는 정부 주도 하의 자원 집중 투입을 통한 효율적 성과 창출 기여가 가능했으나,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시대에는 파괴적 혁신을 저해하고 새로운 미래 분야에 대한 도전 및 탐색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지시적 혁신 모델의 구조적 모순 탈피가 시급합니다. 정부 주도의  $n$ 대 전략 분야 사전 설정 등이 연구 창의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5년 마다 정권 및 정책 기조에 따른 과제 예산 변동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일관된 과제 채택률 및 지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원 시스템 확립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없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자율적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며, 외부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안정적 연구 연속성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향식 및 연구자 생애 주기 맞춤형 지원을 위한 기초연구 예산 비율의 제도적 고정이 요구됩니다.

##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심사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

국내 공공 R 심사의 고질적 상피제 부작용 극복이 필수적입니다. 유관 전문가 전면 배제로 인한 비전문가에 의한 전문가 심사 역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기획-평가 권한 분리 및 심사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제어 장치 강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에 민간 우수 심사 모델 도입 및 글로벌 피어 리뷰 활성화가 필요하며, 해외 전문가 활용을 통한 상피제 문제 극복 및 독립적 평가 진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연구자 신뢰 기반의 정성적 평가 시스템 전환이 필요합니다. 단기 성과(논문, 특허, 기술이전, 창업 등) 위주의 정량적 지표를 탈피하고, 연구의 독창성 및 잠재력 중심의 독립적 정성 평가 시스템 구축이 요구됩니다. 특히 서류, 유행에 영합하지 않는, 평생 깊이 있게 한 우물을 파는 연구자들에 대한 과제 안정성 보장 및 이를 위한 심사 제도 개선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결어: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DNA 교체

목적지향적 구호 탈피 및 상향식 방식 전면 확대를 도모해야 합니다. 국가 주도의 일방적 지시에서 연구 현장 중심의 정책 개발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구시대적 시각 폐기가 요구됩니다. 과학기술을 단순한 산업 발전의 도구로 보던 시각을 넘어, 고유의 연구 철학과 전문성을 갖춘 과학기술 '가(家)'로의 주체성 회복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자율과 신뢰 기반의 거버넌스 확립을 제언하며, 자율과 신뢰에 기반한 연구자 중심 R 생태계로의 질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합니다.

## 지정토론 3

# 농생명 과학, 현장에서 미래를 짓다



**한 호 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한림원 농수산학부장)

오늘날 대한민국은 초고령화와 지역소멸, 기후위기, 그리고 AI와 바이오 기술의 급격한 전환이라는 네 가지 거대한 파도를 한꺼번에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는 과거처럼 단순히 공장을 짓고 산업을 키우는 방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근본부터 다시 고민해야 하며, 그 중심에 바로 농생명 과학이 있다. 농생명 과학은 이제 단순히 농사짓는 기술을 넘어, 식량안보를 지키고 환경을 회복하며 지역 경제를 살리는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기술인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 그동안 과학자가 경제 성장을 돕는 기술 공급자였다면, 앞으로는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회 변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특히 현장 경험이 풍부한 농생명 과학자들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참여하여, 행정 중심의 탁상공론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길이 열려야 한다.

또한, 농생명 과학은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열쇠가 되어야 한다. 사라져가는 지방 도시들을 단순히 복지 지원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그 지역만이 가진 독특한 생명자원을 산업화하는 '기회의 땅'으로 바꾸어야 한다. 지역의 자원을 스마트농업이나 푸드테크와 연결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이 모여든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의 획일적인 지침이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상향식 연구 체계로 전환하여 지역 공동체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생태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거나 토양과 수자원을 관리하는 연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최소 10년 이상의 꾸준한 관찰과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단기 성과 중심 지원 방식은 이러한 장기적인 기술 축적을 가로막고 있다. 연구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공공의 이익과 미래 가치를 위해 장기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깊은 신뢰와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농생명 과학은 우리 사회의 변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뿌리이다. 연구실의 전문성과 농촌 현장의 생명력이 긴밀하게 연결되고, 과학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단단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는 바로 그 현장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 지정토론 4

## 의과학의 미래를 여는 열쇠, 의사과학자의 ‘Protected Time’ : 연구 전념 시간 보장을 통한 소명 회복과 중개연구 활성화 방안



박 영 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한림원 의약학부장)

의과학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을 넘어,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해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는 “생명에 대한 과학적 응답”입니다. 이 중심에는 의사과학자(Physician-Scientist)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의과학의 위기는 단순한 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자로서의 소명의식’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마모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들이 다시금 연구 현장에서 가슴 뛰는 발견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지에 기대는 구조를 넘어 “**실질적인 연구 집중 시간(Protected Time)**”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의과학은 기초생명과학의 연구 성과를 환자의 치료에 연결하는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이를 위하여 의사과학자는 연구실(Bench)에서 발견한 가설을 임상에 적용하고, 반대로 임상에서 마주한 한계를 다시 연구실의 과제로 가져옵니다. 따라서 의사과학자의 연구는 의료 현장과 물리적·지적으로 긴밀히 결합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병원은 생존을 위해 대량의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거대 종합병원’의 역할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의사과학자는 교수이자 의사로서 하루 수십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며, 남는 자투리 시간을 쪼개 연구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고도의 지적 에너지가 필요한 과학적 탐구는 ‘남는 시간’에 수행할 수 있는 부업이 아닙니다. 대학병원의 수익 구조가 진료 실적에 치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연구는 개인의 휴식 시간을 반납해야만 가능한 ‘희생’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연구의 연속성을 끊고, 유능한 인재들이 연구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의사과학자가 과학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인 해결책은 'Protected Time(연구 전념 시간)'의 제도화입니다. Protected Time은 단순히 진료를 줄여주는 차원을 넘어, 해당 시간 동안에는 병원의 행정 및 진료 업무로부터 물리적·심리적으로 완전히 격리되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법규나 내부 규정으로 강제되어야 합니다. 의사과학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보장될 때, 비로소 세계적인 수준의 중개연구 성과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연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Protected Time이야말로, 고갈되어가는 의사과학자들의 소명의식을 되살리고 대한민국 의과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시킬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 지정토론 5

# 성공의 뒷, 한국 과학기술 정책의 경로 의존성



홍 성 욱

서울대학교 과학학과 교수  
(한림원 정책학부장)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은 그 탄생부터 ‘과학 그 자체’의 진흥이라기보다 산업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설계되었다. 1960~70년대에 형성된 이 제도적 틀은 이후 수십 년간 거의 변형되지 않은 채 지속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강한 경로 의존성(path-dependency)을 보여주고 있다.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설립과 이후 운영 방식은 이러한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초대 소장이었던 최형섭 박가가 미국을 순회하면서 우수 인재들을 만나 “노벨상을 원하면 미국에 남고, 산업기술을 발전시키려면 귀국하라”고 말했던 일화는, 당시 국가가 과학기술에 부여한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과학은 자율적 탐구가 아니라 산업기술을 뒷받침하는 기초로 위치 지워졌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된다. 정부는 중화학 공업 육성을 핵심 국가 전략으로 설정했고, 이에 따라 공과대학과 새롭게 출현한 많은 정부출연연구소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았다. 기술 연구는 산업 현장의 수요와 긴밀히 결합했고, 과학기술 정책은 사실상 산업정책의 하위 범주로 기능했다. 이 시기 형성된 ‘정부-기업-출연연구소’의 삼각 협력 구조는 이후 한국형 혁신 체제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학 중심의 기초연구는 상대적으로 주변화되었고, 학문적 자율성보다는 정책 목표에의 기여도가 연구 지원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적으로는 기초연구 지원 체계도 구축되었다. 1977년 연구재단이 설립 되었지만, 1980년대에 이르러 과학기술처는 기초연구를 ‘순수 기초연구’와 ‘특정목적 기초

연구'로 구분하고, 후자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특히 전자·정보·통신, 기계, 신소재, 생명공학, 에너지 등 산업적 파급력이 큰 분야들이 목적기초연구로 지원되면서, 기초연구는 다시 한번 개발주의적 틀 안에 포섭되었다. 이는 기초연구의 독립적 축적보다는 단기적 응용 가능성을 중시하는 정책 경향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산업기술 중심의 정책은 분명한 성과를 만들어냈다. 한국 국민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포니 자동차 개발, TDX 개발, CDMA 표준 개발,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성장 등은 모두 국가 주도의 기술 개발과 산학연 협력의 결실이었다. 이들 성과는 한국 경제의 고속 성장을 견인했고, 동시에 과학기술 정책이 산업 발전에 종속되는 구조를 정당화하는 강력한 근거로 작용했다. 문제는 바로 이 '성공 경험'이 이후 정책 선택의 폭을 오히려 좁히는 경로 의존성을 낳았다는 것이다. 일종의 '성공의 덫'이었던 셈이다.

오늘날 한국은 GDP 대비 5%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를 수행하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그 내적 구조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개발주의 패러다임의 흔적이 뚜렷하다. 기초연구 지원 50% 비중 확대를 공약하며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원천 연구'라는 범주를 새로 만들어 통계적으로 기초연구 지원 50%의 목표를 달성한 사례는 이러한 한계를 잘 보여준다. 즉, 제도는 변화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정책은 미래 먹거리인 산업기술과 이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응용연구를 중심으로 정책의 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조정되어 왔다. 결국 한국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 문제는 단순한 투자 규모가 아니라, 초기 형성된 산업 지향적 제도와 성공 경험이 만들어 낸 경로 의존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있다.

모든 문화는 경로 의존적일 뿐 아니라 수행적(performative)이다. 한국의 독특한 과학기술 정책은 이 정책에 잘 적응하는 과학기술자 집단을 형성했고, 이들은 이 정책이 요구하는 성과를 냄으로써 기존의 과학기술 정책을 강화하거나 공고화하는 방향으로 정당화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도 변하고 과학기술자 집단도 변하지만, 1960~1970년대에 형성된 몇 가지 기본적인 틀—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 과학 연구보다 기술이 중시되는 정책, 추격형 정책과 마인드, 톱다운·대형과제 중심의 R&D 분배, 강한 관료제와 엘리트 과학기술자 그룹의 공생—은 유연한 형태로 모습을 바꾸면서 거의 변함 없이 유지된다.

과거의 역사는 문화가 되어 우리 주변의 환경 속에 녹아든다. 문화는 마치 우리가 숨 쉬는 공기나 물고기가 헤엄치는 물처럼 그 특이성을 느끼기 힘들다.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문화의 단점이나 한계를 느끼기도 어렵다. '한국적'인 발전 모델이 있고, '한국적'인 정책과 과학기술 연구가 있다고 강변하는 사람 앞에서, 문화의 특성상 다른 문화와의 우위를 평가하기도 어렵다. 다만 우리가 추격자의 위치를 벗어나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특히 기초과학 연구에서도 탈추격형, 선도형, 창조형 연구를 수행하고, 이에서 창발되는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면,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과학기술 정책적 상상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 한림원탁토론회는...



한림원탁토론회는 국가 과학기술의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전략을 세우고, 동시에 과학기술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한림원의 대표적인 정책토론 행사입니다.

지난 1996년 처음 개최된 이래 지금까지 200회 이상에 걸쳐 초·중·등 과학교육, 문·이과 통합문제, 국가발전에 미치는 기초과학 등 과학기술분야의 기본문제는 물론 정부출연연구소의 발전방안, 광우병의 진실, 방사능, 안전 방제 등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림원은 과학기술 선진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현안문제 중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라 주제를 선정하고, 과학기술 유관기관의 최고책임자들을 발제자로 초빙하여, 한림원 석학들을 비롯해 산·학·연·정의 전문가들이 심도 깊게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론결과는 책자로 발간, 정부, 국회와 관련기관에 배포함으로써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정책 입안자료를 제공하여 여론 형성에 기여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 한림원탁토론회 개최실적 (2023년 ~ 2026년) ■

회차	일 자	주 제	발제자
207	2023. 3. 15.	한국 여성과학자의 노벨상 수상은 요원한가?	김소영, 김정선
208	2023. 3. 22.	기정학(技政學) 시대의 새로운 과학기술혁신정책 방향	이승주, 이 근, 권석준
209	2023. 4. 13.	우리 식량 무엇이 문제인가?	곽상수, 이상열
210	2023. 5. 24.	대체 단백질 식품과 배양육의 현재와 미래	서진호, 배호재
211	2023. 6. 14.	영재교육의 내일을 생각한다	권길현, 이덕환, 이혜정
212	2023. 7. 6.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후 방류의 국내 영향	정용훈, 서경석, 강건욱
213	2023. 7. 12.	인구절벽 시대, 과학기술인재 확보를 위한 답을 찾아서	오현환, 엄미정
214	2023. 8. 17.	과학·영재·자사고 교장이 이야기하는 바람직한 학생 선발과 교육	허우석, 오성환, 김명환
215	2023. 10. 27.	과학기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시리즈 (I)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대전환	정선양, 박상철
216	2023. 11. 9.	과학기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시리즈 (II)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데이터 기반 식단 및 의학	박용순, 정해영
217	2023. 12. 5.	과학기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시리즈 (III)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퍼스널 모빌리티	공경철, 한소원
218	2023. 12. 19.	새로운 의료서비스 혁명: 디지털 치료제	서영준, 배민철
219	2024. 1. 31.	노쇠와 근감소증	원장원, 권기선, 고홍섭
220	2024. 3. 13.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박민수, 김성근, 홍윤철
221	2024. 3. 19.	코로나보다 더 큰 위협이 올 수 있다, 어떻게 할까?	송대섭, 신의철
222	2024. 3. 20.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의 필수 요소 - 과학네트워킹	김형하, 이상엽, 조희용

회차	일 자	주 제	발제자
223	2024. 5. 10.	시민, 과학자가 되다	홍성욱, 박창범, 김 준
224	2024. 5. 29.	GMO,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	하상도, 김해영
225	2024. 6. 21.	전략기술시리즈 (I) K-반도체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협력 전략	정은승
226	2024. 8. 21.	조류인플루엔자의 위험: 팬데믹의 전조인가?	윤철희, 김우주, 송대섭
227	2024. 8. 28.	전략기술시리즈 (II) AI로 과학하기: 새로운 패러다임	문용재, 백민경, 서재민
228	2024. 11. 18.	전략기술시리즈 (III) K-방산의 완성: 첨단 항공기 엔진 독자 개발	심현석, 이흥철, 김재환
229	2024. 12. 3.	과학기술 정책은 얼마나 과학적인가?	이정동, 이성주
230	2024. 12. 17.	전략기술시리즈 (IV) 첨단 바이오, 난치병 치료의 게임 체인저	최강열, 신영기, 천병년
231	2024. 12. 20.	뉴럴링크: 뇌와 세상의 소통	임창환, 정재승
232	2024. 12. 24.	전략기술시리즈 (V) 식탁 위 숨겨진 건강 비밀: 마이크로바이옴이 열어가게 미래	이주훈, 김상범, 방예지
233	2025. 2. 25.	연구성과의 가치,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학연
234	2025. 4. 29.	한국 AI의 미래 시리즈(I) AI 3대 강국을 향한 우리의 전략	이경우, 김진형
235	2025. 5. 9.	흥미로운 양자정보기술 ±20년	이승우, 안재욱, 김기환, 배준우, 이수준, 김윤호, 최정운
236	2025. 5. 15.	한국 AI의 미래 시리즈(II) 국가 AI 특화 인재 육성과 확보방안	이상원, 신진우
237	2025. 5. 29.	한국 AI의 미래 시리즈(III) AI+X 대전환의 양면성: 혁신, 도전, 한계	이상근, 박준기

회차	일 자	주 제	발제자
238	2025. 7. 9.	동물실험 없는 미래, 정말 가능할까?	박준원, 임경민
239	2025. 9. 10.	AI 프런티어 시리즈 (I) 「AI × STEM 교육」: 교실에서 시작되는 미래 인재	유연주, 차대길, 권가진
240	2025. 9. 18.	AI 프런티어 시리즈(II) 「AI × K-방산」: AI로 국방의 혁신을 이루다	곽기호, 서영우
241	2025. 9. 29.	AI 프런티어 시리즈(III) 「AI × Physics」: 양자, 물질, 우주를 다시 쓰다	박경덕, 이인호, 홍성욱
242	2025. 10. 21.	AI 프런티어 시리즈(IV) 「AI × 신소재」: 미래 산업소재의 혁신 설계	최윤석, 한승우, 신정호
243	2025. 11. 11.	우리나라 과학기술 여성 리더십, 도전과 기회	조연주, 신용현
244	2025. 11. 13.	AI 프런티어 시리즈(V) 「AI × 농생명」: AX 융합형 지속 가능 농생명 혁신	최도일, 김상오, 성제경
245	2025. 11. 18.	AI 프런티어 시리즈(VI) 「AI × BCI」: 뇌와 인공지능의 미래 연결	정천기, 양성구, 안종현, 김 철, 한재호
246	2025. 11. 21.	AI 프런티어 시리즈(VII) 「AI × 신약개발」: 구조예측에서 임상까지, 혁신의 경계를 넘다	석차옥, 백인화, 조경현, Alex Zhavoronkov
247	2026. 1. 16.	R&D 실패란 무엇인가: 정의·책임·미래 설계	염한웅
248	2026. 2. 23.	스타링크 시대의 이동통신: 위성-지상망 공존 시대를 향한 한국의 대응 전략	김승조, 이문규, 최지환
249	2026. 3. 5.	건강한 식사의 기준: 미국 식생활지침 변화와 K-푸드의 재조명	박용순, 장해춘, 박민선, 백무열, 기용기
250	2026. 4. 29.	Weather AI와 국가예보 전략: 기후위기 시대, 예보의 미래는?	이혜숙, Jeff Adie

제251회 한림원탁토론회

# 한국 과학기술, 길을 묻다

이 사업은 복권기금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원을 통한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